

“잊지 않겠습니다”...광주 도심 곳곳 ‘추모 행렬’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참사는 기억될 때 비로소 반복되지 않는다.”

22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단 위에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라고 적힌 신위 앞을 가득 메운 국화꽃이 차분히 놓였고, 분향소 안은 낮은 숨소리와 묵념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분향소 한쪽 벽면에는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등 시민들의 추모 문구가 이어졌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은 차례로 방명록에 이름과 추모의 글을 남긴 뒤, 국화를 올리고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기렸다.

짧은 묵념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눈을 찔린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는 아들도 있었다. 분향을 마친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사고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유가족의 슬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로 벽면을 채웠다. 남형일씨(46·남구 월산동)는 “자신이 제주항공 참사로 세상을 떠난 뒤 전일빌딩과 5·18민주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될 때마다 찾아왔다”며 “바스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한 주 앞둔 22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전국 참사 현장을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주기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일빌딩·송정역사에 분향소 설치...시민들 ‘발길’

유가족 “진상 규명·재발 방지 요구 멈추지 말아야”

참사 유가족협의회 10여명도 분향소를 찾았다. 분향소에 들어선 순간, 유가족들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다. 제단 앞에 국화를 올린 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묵념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상처를 덮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유가족 김용관씨는 “사고의 원인과 책

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대로’면서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같은 참사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송정역에서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역사 2층 광장에 위치한 디지털 분향소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1

년의 기록’ 영상이 상영됐고, 온라인 추모 메시지와 전자 방명록이 함께 운영됐다.

전지철관 앞에 선 시민들은 ‘유가족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문장을 곱씹었다.

박춘신씨(60·여·광산구 송정동)는 “유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계속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일빌딩245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 누구나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찰, 제주항공 참사 피의자 44명 특정

압수물 3000여점 분석...“항철위 자료 검토·추가 조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이 사고 책임자 44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본부는 22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유가족이 고소한 인원은 22명이며, 경찰이 자체 인지한 피의자는 28명이다. 이중 6명은 중복된다.

세부적으로 수사본부가 입건한 28명은 관제 분야 관계자 2명, 조류 관련 관계자 3명, 2007년 공사·허가 관련자 8명, 2023년 공사·허가 관련자 15명 등으로,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유가족 측은 지난 5월13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22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방위각시설, 조류 충돌, 조종, 엔진 등 각 분야 전문가 면담과 항공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수사 기록은 1만500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항철위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할 경우 참고인과 피의자를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 총파업... 시민 불편 우려

광주·전남 조합원 1000명 상경...KTX·일반열차 운행률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 조합원 1000명이 이상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광주·전남·전북)는 22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와 합의한 성과급 정상화 약속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간 밤샘 교섭 끝에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그

러나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으로 성과급을 기존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태를 ‘국가와 노동자 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작년 파업 당시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멈췄고, 올해는 연구용역과 잠정합의까지 거쳤다”며 “합의의ingk가 마르기도 전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가 끝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과 시민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만여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조합원 1750여명(광주 1000여명·전남 750여명) 중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본부 조합원은 총 2700여명이고, 이중 1200명은 필수유지 인력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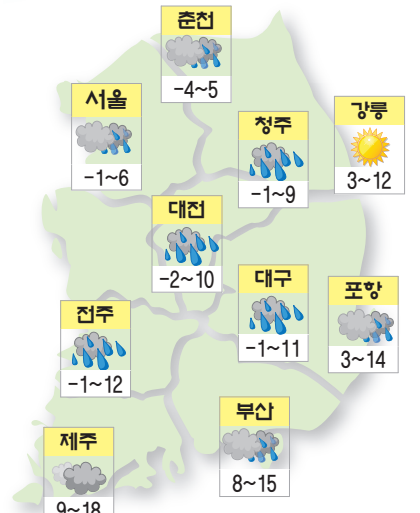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호남지역 KTX의 경우 운행률이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낮아지고,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는 5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철도본부는 파업으로 감소할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오늘의 날씨

맑음	07:38	달림	10:03
맑음	17:25	달림	20:16



광주	0~13
목포	3~12
여수	6~12
순천	2~13
구례	0~12
광주	2~15
임도	4~14
흑산도	7~14
고흥	2~14
진도	3~14

목포	밀물(고)	03:36 / 16:26
여수	밀물(저)	09:00 / 21:45
	밀물(고)	11:11 / 23:07
	밀물(저)	04:28 / 17:18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

만년필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된 A씨(36)의 항소물 기각.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10분 서구 버스터미널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 B씨(43)를 때린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조수석 및 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을 죽이겠다며 납치하려고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시민분향소

27일까지 동구 5·18민주광장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희생된 4명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지부는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희생자 시민합동분향소’를 차렸다.

분향소는 유족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토대로, 희생된 노동자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사고 발생 11일 만에 꾸려졌다. 이날 유가족은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를 기렸다.

유가족은 “광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연대 차원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

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유진 협의회 대표는 “참사 1주기가 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분향소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애도했다.

분향소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향소를 통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지난 18일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발주처와 시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광주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지원 등을 제안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 135번지에서 열린 '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착공식'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 광산고등학교 신축 공사 ‘첫삽’

광주 광산구 주민의 숙원이던 광산고등학교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광산구 하남동 135번지에서 이정선 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산고는 총 293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8559㎡ 규모로 설립된다. 개교는 2027년 3월이다.

시교육청은 광산고가 문을 열면 고등학교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한빛원전 1호기 ‘영구정지’ 촉구 확산

시민단체·종교계, 계속 운전 반대 목소리

22일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4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가동이 정지된 가운데, 계속 운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원회는 이날 한빛원전 입구에서 신도와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빛원전 1호기 수명 종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탈핵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총 638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영광군청에서 한빛원전까지 ‘생명·평화 탈핵 순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영광지역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군민대책위원

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한빛 1호기의 즉각적인 폐로를 요구했다. 앞서 21일에는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 공동행동 회원 300여명이 ‘한빛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에 반해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계속 운전을 지지하며 맞불 집회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계속운전 찬성 측 주민들은 ‘지역 문제는 지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원전 가동 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처럼 한빛원전 1호기의 향후 운운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향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합의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